투데이 칼럼

멀어진 한반도의 평화

정 복 규
논설위원

갈수록 한반도의 평화가 멀어지고 있다. 전쟁 위험까지 높아가고 있다. 지난 2023년 한해 남북관계는 평화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 만큼 말 그대로 벼랑 끝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북한은 다양한 신무기를 선보이며 위협 강도를 높였다. 평화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무력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먼저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2023년 2월 화성-15형을 시작으로 2023년 들어서만 5번째이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6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일본 서쪽 해상에 떨어졌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바로 전날엔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과 핵협의그룹 활동,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북한의 군사 행보는 이미 예고돼왔다.

김정은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 타격용 전술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2023년 새해 첫 날부터 서울 상공까지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소형화 된 형태의 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무인잠수정 해일과 각종 미사일도 선보였다. 미국을 겨냥한 무력 도발도 계속됐다.

2월과 3월에는 화성-15형과 화성-17형을 발사했고, 4월과 7월에는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리며 위협을 노골화했다.

또 9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나라는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시작으로 북핵 대응 핵협의그룹 활동이 본격화됐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북한은 오히려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위기감을 더 고조시켰다.

이제 핵 대결 구도로 전환됐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북한은 핵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미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이다. 3번째 시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한 북한은 위협 수위를 높였다.

노동신문도 2023년 가장 큰 성과로 정찰위성 발사 등을 거론하며 자화자찬했다. 극한으로 치달은 대결 구도 속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맞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병들은 내려놨던 권총을 다시 들어 무장했다. 최전방 감시 초소도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남북 간 통신선도 끊긴 상태에서 안전핀 역할을 하던 평화적 완충지대는 다시 군사적 대결 지대가 됐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적대의 말 폭탄은 전략무기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감 속에 북한의 군사 행보는 2024년에도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거의 핵전쟁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의 차기 정권과 핵에 관한 거래를 추구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은 남북 모두에게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념을 떠나 비극을 막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공멸(共滅) 뿐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위스콘신에서 경제 성과 홍보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의 어스 라이더 브루어스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언급하면서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라고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호주의 날' 기념 행사 즐기는 사람들

지난 26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플라이보드 쇼를 관람하고 있다. '호주의 날'은 1788년 1월 26일 영국 함대가 처음으로 호주에 상륙해 시드니가 영국 통치권에 있음을 선포한 날로 호주 국경일이다. 호주 원주민들은 이날이 영국에 침략당한 '침략의 날'이라며 이를 기념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사 설

의사가 돕는 죽음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이미 발의된바 있다.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종교·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생명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 등의 연명 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환자가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법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마련됐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한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의향서에 서명해도 법의 허점이 많은 데다 가족이나 의료진의 몰이해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병동도 태부족이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만성 호흡부전·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에 그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은 1,0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기대 수명(83.5세)과 건강 수명(66.3년) 사이에는 무려 17.2년의 격차가 있다. 병든 채로 20년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앞당기도록 돕는 게 능사가 아니다.

'존엄한 죽음'을 논의하기 전에 '존엄한 돌봄'이 우선돼야 한다. 사실 죽을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다.

하지만 자살할 권리와 자살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의사가 돕는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아직 많지 않다. 법안 통과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좀 더 필요한 문제다.

도내 어느 프로파일러 성추행 혐의

프로파일러(profiler)는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투입된다.

프로파일러(profiler)로 활동한 어느 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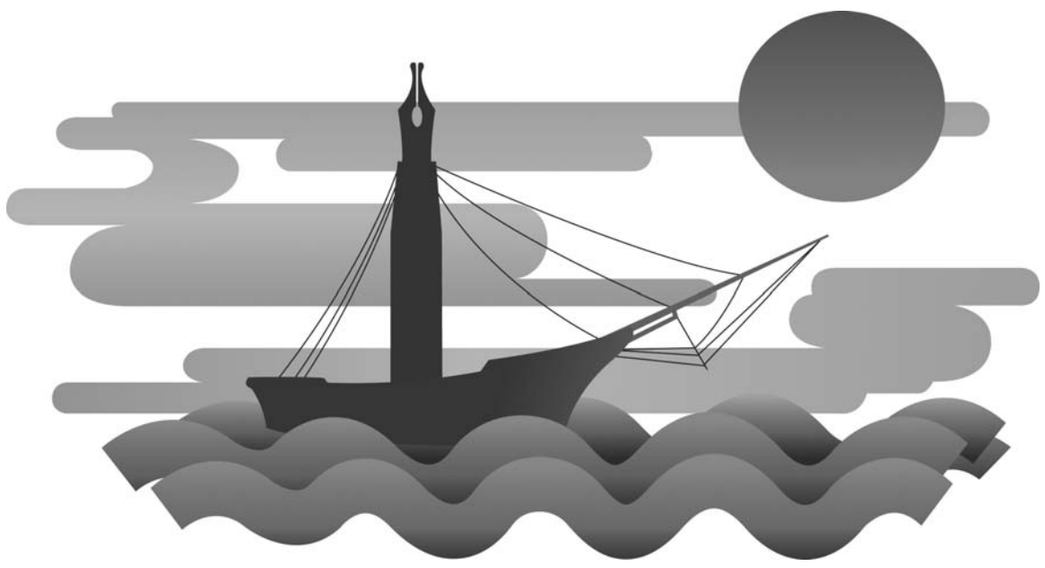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사자를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일부 변사 사건 사진을 보낸 사실은 맞지만, 프로파일러 준비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고의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 또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추행 혐의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해당 여성에게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음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